

# 인구절벽시대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이찬영<sup>1)</sup>, 문제철<sup>2)</sup>

---

1)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 < 요약 >

### I. 서론

### II. 인구이동에 대한 기존연구

1. 국내선행연구
2. 해외선행연구

### III. 인구이동 현황: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1. 광주지역 인구이동 현황
2. 전남지역 인구이동 현황

### IV.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및 실증분석 전략
2. 변수 및 출처
3. 이원오차성분모형 분석
4.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 V. 요약 및 정책과제

1. 결과요약
2. 정책과제

### 참고문헌

## 〈 요약 〉

한국경제가 인구보너스 시대에서 인구오너스(onus, 무거운 짐) 시대로 전환중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은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최소화 대책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을 다면적(연령별, 지역 간 이동)으로 검토하고, 16개 광역자치체 간 인구이동에 관한 패널분석을 통해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파악되었다. 첫째,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은 주로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내지 광주지역으로의 진학 또는 취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40~50대에서 2010년을 전후하여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수도권에서의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광주지역은 수도권에서의 유입보다 전남권으로 유출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40~50대에서 순유출이 되고 있으나, 전남은 수도권에서 40~50대의 유입되는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의 증대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는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이주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30대는 임금, 40대는 고용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의 인구이동 관련 정책은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일자리의 양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령대에 상관없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제반 요인(전세가격, 문화서비스 혜택, 의료서비스 혜택, 교육여건, 도로포장률 등)이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의 대응변수로 사용한 전세가격의 인구이동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해당지역에서는 인구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원인은 위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광주는 고용여건 측면에서 낮은 임금이 인구유출의 주된 요인이지만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부담이 인구유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에서는 20~30대의 인구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다. 고용여건 측면에서 평균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 일자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뿐,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 저하도 인구유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취약 요인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현재의 인구순이동률 보다 광주의 인구순이동률은 0.186%, 전남은 0.309% 높아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본적으로 인구유출 최소화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을 해결하고 그동안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 주택수급정책의 안정화, 그리고 문화기반 시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 대학의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 실례로 전남지역의 경우 풍부한 해양자원, 항공우주산업 기반, 생명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콘텐츠에 바탕을 두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잔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역시 이전된 공공기관과 3대 전략산업 부문에 부합하는 대학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지역 전략산업 또는 특화분야 추진 시 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고용의 안정성이 일정수준 제공되고 중간수준의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소위 광주형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이동의 결정에 있어서 주거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수급정책을 펼침으로써 인구이동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주택수급정책을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지역 인구의 유출입에 줄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문화기반시설을 고도화해야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및 시설을 미래환경에 부합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I. 서론

한국경제는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무거운 짐) 시대로 전환 중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인구 중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양해야 할 고령층 비율은 낮아 한국의 경제활성화는 용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근로세대의 부담이 확대되면서 인구오너스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생산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기반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감소가 일반적으로 저출산, 인구유출, 사망에 의해 발생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고<sup>1)</sup> 기대수명에 있어서는 양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유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1>에 의하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이미 인구절벽시대<sup>2)</sup>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년 동안 257천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대경권의 인구가 77천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호남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2.0%에서 2015년 10.2%로 낮아졌다.<sup>3)</sup>

<표 1> 권역별 인구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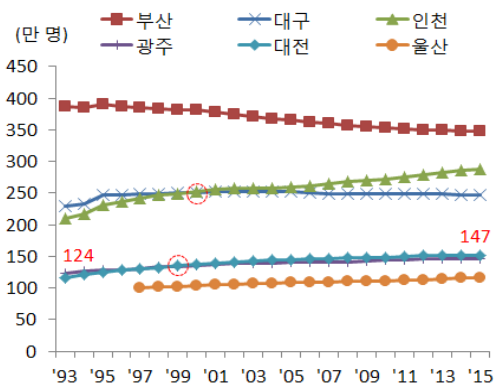
권역	1995(A)	2005(B)	2015(C)	C-A
수도권	20,207 (45.0)	23,339 (47.9)	25,131 (49.3)	4,593 4.3
동남권	7,817 (17.1)	7,888 (16.2)	7,978 (15.7)	160 -1.5
충청권	4,528 (9.9)	4,895 (10.1)	5,323 (10.4)	795 0.5
호남권	5,475 (12.0)	5,274 (10.8)	5,217 (10.2)	-257 -1.8
대경권	5,232 (11.5)	5,210 (10.7)	5,155 (10.1)	-77 -1.3
강원권	1,528 (3.4)	1,517 (3.1)	1,533 (3.0)	4 -0.3
제주권	516 (1.1)	556 (1.1)	611 (1.2)	94 0.1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 )는 전체인구 대비 비중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1) 2014년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497명으로 1위이고, 이어서 제주(1.481명), 울산(1.437명), 충남(1.421명), 경남(1.409명), 경북(1.408명), 충북(1.363명) 순이다.
- 2) 원래 “인구절벽”은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감소할 때를 가리킨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시대를 총칭하여 인구절벽시대로 정의되고 있다.
- 3) 광주·전남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111천명 감소하였고,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동안 7.6%에서 6.6%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년 광주인구는 약 147만 명으로 6대광역시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광주의 인구가 20여만 명 증가하였지만, 인구 규모면에서는 대전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1999년에 이미 추월당함).<sup>4)</sup> 인구구성비에 있어서도, 전체 인구의 2.8~2.9%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6대 광역시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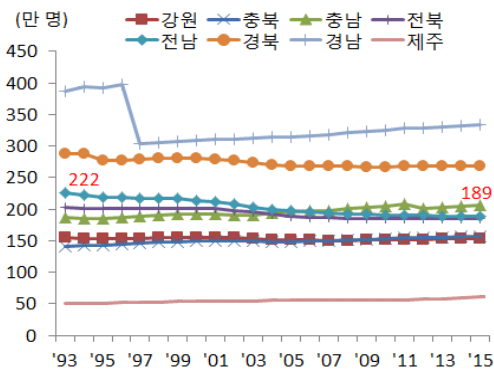
<표 2> 6대 광역시 인구 비중

(단위:%)

지역	1995	2005	2015
부산	8.54	7.50	6.83
대구	5.41	5.17	4.85
인천	5.08	5.32	5.67
광주	2.80	2.88	2.88
대전	2.74	2.98	2.97
울산	NA	2.23	2.28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 8개도 인구 추이



주 : 96년에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3> 8개도 인구 비중

(단위:%)

지역	1995	2005	2015
강원	3.35	3.12	3.01
충북	3.14	3.07	3.08
충남	4.05	4.02	4.03
전북	4.39	3.89	3.65
전남	4.80	4.06	3.72
경북	6.06	5.53	5.27
경남	8.60	6.47	6.55
제주	1.13	1.14	1.20

주 : 96년에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4) 일반적으로 광역시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부르는데, 현재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순이다. 인구수가 투표권력(voting power) 내지 경제활동의 규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구수 내지 인구수의 변화가 시사 하는 바는 크다.

전남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림 2>는 8개도의 인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남의 인구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94년 222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4년에는 189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남의 인구가 연평균 0.78%씩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2015년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효과에 힘입어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천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구성비에 있어서도 <표 3>에서처럼 지난 20년간 1.1%p 하락하여 8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지자체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례로, 광주는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를 통해 청년층의 유출을 예방하려 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민선 6기 도정 핵심 아젠다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선정하여 이 지역 청년층의 잔류뿐만 아니라 유출된 청년의 귀환을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인구의 이동과 함께 연령대별 인구이동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연령대별 인구이동의 특징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어서 기존연구와는 차별되게 16개 시도간의 인구이동을 전입지와 전출지에 기초하여 쌍(pair)으로 하는 패널표본을 구축하여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하고<sup>5)</sup>, 이를 세부 연령대별로 확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델 설정시에는 고용여건(고용률, 임금, 양질의 일자리 비중)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여건(정주,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설명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이동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이동을 전입지와 전출지에 따라 전 지역 간 이동, 수도권-비수도권간 이동, 비수도권간 이동으로 유형화<sup>6)</sup>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인구절벽시대에 처해있는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특징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 그리고 유형별 세부 분석을 시도함에 따라, 이 결과에 기초한 부분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유출 최소화 또는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인구이동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인구이동 현황을 기술한다. 이어서, IV장에서는 계량분석에 사용되는 모델 및 분석전략을 소개하고 16개 시도 지역 간 인구이동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원인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구유출 최소화 또는 인구유입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5) 광주·전남에 국한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할 경우, 소표본 사용으로 인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연령대별 인구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에 있어서,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분석에는 16개 시도 자료를 이용한다.

6) 일례로, 전 지역 간 이동은 광주↔서울, 전남↔경남, 부산↔제주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은 광주↔경기, 대구↔인천, 대전↔서울 등을 포함하고, 비수도권간 이동은 광주↔충남, 전남↔충북 등이 포함된다.

## II. 인구가동에 대한 기존연구

### 1. 국내선행연구

인구가동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급격한 쇠퇴가 동시에 진행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에는 노동력을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취업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김기승·정민수, 2013).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동은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공공재 제공 여부 등 지역의 제반 특징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표 4> 주요 선행연구 정리

저자(년도)	주요내용(데이터, 주요변수 및 추정결과, 분석방법 등)
김현아(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2006년 16개 시도 간 전 연령대 인구가동 분석</li> <li>- 기대소득이 높고, 교육여건이 양호하고, 총도로연장이 길고, 공공재의 가격에 해당하는 1인당 재산세가 높고,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li> <li>-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패널분석 적용</li> </ul>
박추환·김명수(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년~2000년 농촌과 도시 지역 간 인구가동 시계열 분석</li> <li>- 도시지역 임금수준 변동이 농촌과 도시 간 인구가동을 유발하고 두 지역 간 상대가격의 변동이 지역 간 인구가동에 대한 향후 예측오차 변동분을 가장 많이 설명</li> <li>- 구조적 VAR모형(지역 간 임금격차를 전제로 Granger 인과성 검정, 충격반응 효과, 분산분해기법) 적용</li> </ul>
최성호·이창무(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2010년 지역 간 주민등록 인구가동 연간자료 이용</li> <li>- 이동거리, 인구규모, 주택가격을 주요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연령대별 이주지 선택요인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40대의 경우, 이주거리에 대한 저항감과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큰 반면, 관심 연령대인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주거리에 대한 저항감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li> <li>- 시계열-단면적 분석 모형(시점 더미 이용) 적용</li> </ul>
김리영·양광식(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2010년 도시유형별(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인구유출입 규모 이용</li> <li>- 사업체수, 재정자주도, 대중교통서비스, 각종서비스(문화, 보육, 교육, 의료), 주택가격, 인구규모 변화율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li> <li>-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li> </ul>



세부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인구이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거시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김현아(2008)는 순재정편익 분석을 통해 광역지자체 간 그리고 기초지자체 간 인구이동의 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은 이주에 따른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전세가격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지역 간 이동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순재정편익이 인구유입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재원은 이러한 인구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추환·김명수(2006)는 Todaro의 가설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간 임금격차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도시지역의 높은 기대소득이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인하는 주요인임을 밝혔다. 최성호·이창무(2013)는 노년 가구를 주 관심대상으로 이주지 선택 과정의 시계열적 변화(2000~2010년)를 이동거리, 아파트가격, 인구규모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연령대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이주시 이주 거리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인구 규모가 큰 지역 또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호가 추세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고, 이러한 현상은 60세 이상 노년에게서 더욱 뚜렷함을 밝혀냈다. 한편, 김리영·양광식(2013)은 인구유입의 주된 결정요인이 지역의 사업체수 변화임을 밝히면서 지역의 인구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2. 해외선행연구

해외의 선행연구는 인구이동을 크게 소득, 주택가격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와 정부혜택 또는 지방공공재 제공 등의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 양분된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 몇 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먼저, Todaro(1981)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도시와 농촌간의 절대소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Plantinga et al.(2012)은 주택가격이 인구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낮아지지만 고소득자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이주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인구이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Tiebout(1956)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모든 개인이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인구이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공공재를 인구이동의 주요인으로 본다. 비슷한 맥락에서 McKinnish(2007)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에 대한 미국의 주(state)별 정책적 차이가 주(state)지역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Conway and Houtenville(2003)는 노년층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증여상속세가 높은 지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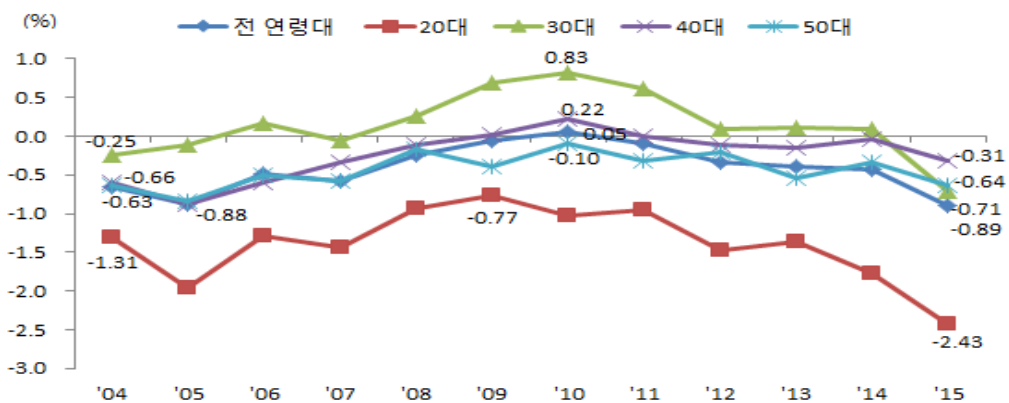
### Ⅲ. 인구이동 현황: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 1. 광주지역 인구이동 현황

<그림 3>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의 광주지역 인구순이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완만한 역U자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인구순유출률이 점차 낮아지는(절대값 기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순유출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수치적으로는 2005년에 전 연령대의 인구순이동률이 -0.88%를 기록하였고, 이후 인구유출률이 계속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2010년 인구순이동률은 0.05%)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인구순이동률이 -0.89%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출되었는데, 이는 2006년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인구순이동률이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대와 30대의 인구순이동률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대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2009년 동 연령대의 인구순이동률이 -0.77%로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이후로 계속 인구유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2.43%의 인구순이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30대의 경우에는 2010년에 인구순이동률이 0.83%로 가장 높은 인구유입률을 기록하였다가 그 이후로 유입 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 2015년에 인구순이동률이 -0.71%에 이르고 있다.

<그림 3> 광주지역 연령대별 인구순이동률 추이



주 : 1) 전 연령대는 20대 이상

2) 인구순이동률=(유입인구-유출인구)\*100/전년도인구,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4>는 광주지역 주요 연령대의 인구순이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대의 경우 2004년에는 3,288명의 인구가 순유출 되었고, 2009년에는 순유출 규모가 1,669명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순유출 규모가 다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거의 5천명에 육박하는 20대 인구가 순유출 되었다. 30대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정 기간과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매년 500명 내외의 인구순유출 또는 인구순유입이 발생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큰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2010년에는 순유입인구가 2,014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이후 인구순이동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1,625명의 인구가 순유출 되면서 동 연령대의 인구이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는 2010년 단 한차례 인구순유입이 있었는데, 그 이후 순유출 되는 인구 규모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0대는 전반적으로 20대의 인구이동 추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순유출 되는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후 다시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타 지역으로 1,325명의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50대는 인구특성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 광주지역 연령대별 인구순이동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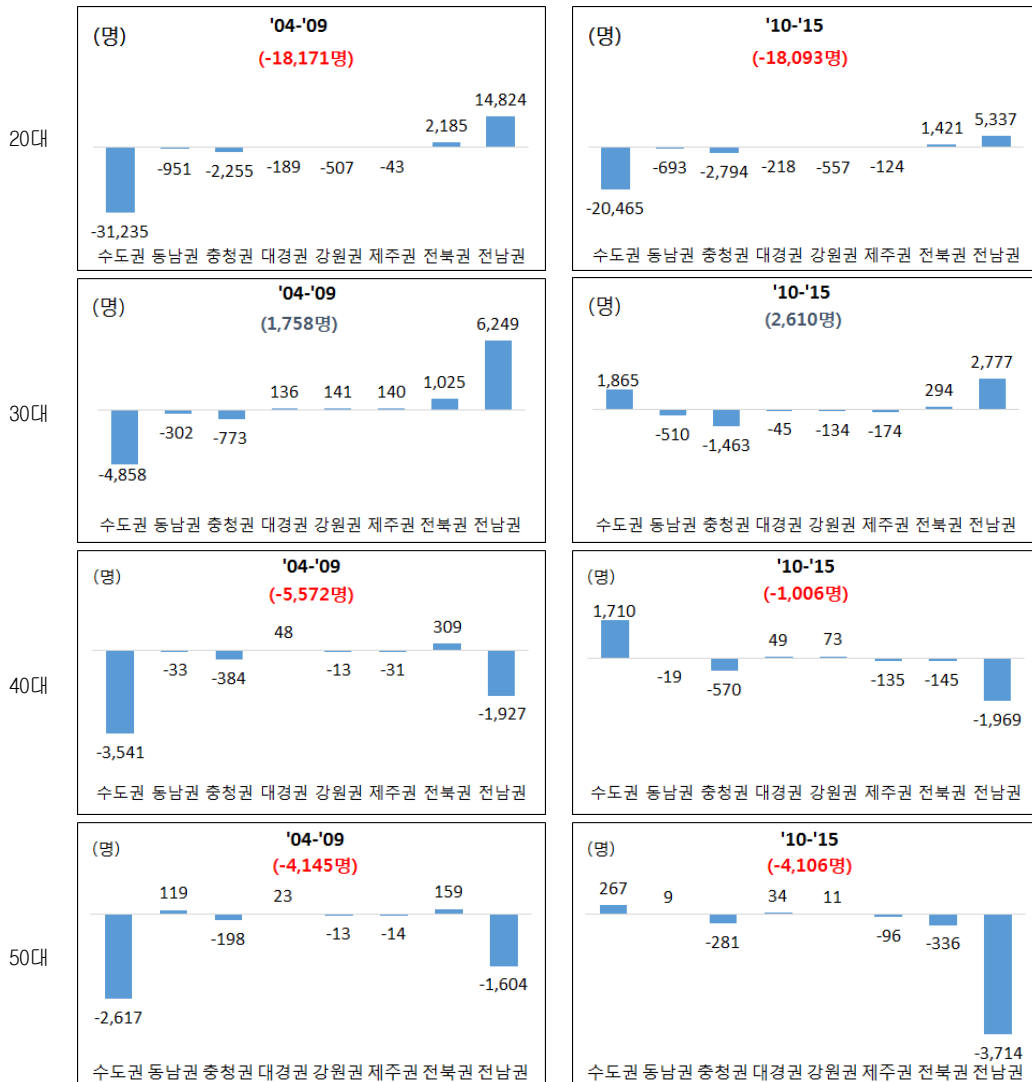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를 위해 <그림 5>에서는 각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현황을 지역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대경권-대구, 경북)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점과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여 양 기간(2004~2009년, 2010년~2015년)으로 구분하여 이를 검토한다.

<그림 5> 광주지역과 타 지역 간 인구유출입 현황



주 : ( )는 해당기간 동안의 인구순이동 규모를 나타내며, (+)는 순유입을,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먼저, 20대의 경우에는 양 기간 인구 순유출 규모가 각각 18,000여명(연평균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전남권에서의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순유출과 전남권에서의 순유입 규모는 최근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금융위기

이후 기간) 수도권으로 유출된 20대는 20,465명인데 이는 2004~2009년(양 기간을 6년씩 맞추기 위해 편의상 금융위기 이전 기간으로 정의) 순유출 규모(31,235명)의 약 2/3수준에 해당된다. 전남권에서 순유입된 인구규모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14,824명에서 5,33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 순유입된 인구규모의 2/3정도이다.

30대 연령대의 인구이동 가운데 나타난 큰 특징은 수도권간의 인구이동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과 전남으로부터의 순유입인구 규모가 크게 감소한 점이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수도권으로 4,858명이 순유출 되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1,865명의 인구가 순유입 되었다. 반면 전남권에서의 순유입 규모는 양 기간 동안 6,249명에서 2,777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인구이동 규모에 있어서 비록 수도권 또는 전남권 보다는 작지만, 충청권으로의 순유출 되는 인구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773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463명이 순유출 되었다.

40대 인구이동 역시 주로 수도권 또는 전남권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금융위기 기간을 기점으로 인구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도 30대의 인구이동과 흡사하다. 그러나 40대의 경우에는 비록 전체적인 순유출규모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5,572명에서 1,006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양 기간에 걸쳐 약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50대는 양 기간 모두 4,000여명의 인구가 순유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2,617명의 순유출이 267명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남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2010년 이전 6년 동안 1,604명의 인구가 순유출 되었는데, 최근 6년 사이 그 규모가 3,714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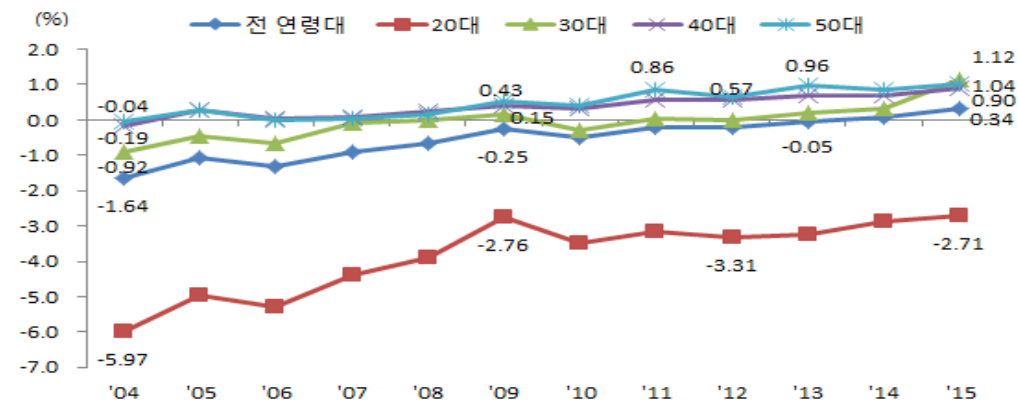
## 2. 전남지역 인구이동 현황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유출규모는 축소되고 유입규모는 확대되면서 201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순유입 되기 시작하였다(<그림 6> 참조). 수치적으로는 인구순이동률이 2004년 -1.64%에서 2014년에는 0.06%를 기록하였고, 2015년 현재 인구순이동률은 0.3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수지<sup>7)</sup>가 점차 개선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인구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 20대의 경우 인구순이동률이 2004년에 -5.97%를 기록한 뒤에 금융위기 직

7) 국제수지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를 집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인구수지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 관계를 집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유출된 인구보다 많으면 인구수지 흑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수지 적자가 된다.

후에는 -2.76%까지 회복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3%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경우에는 인구 순유입세가 확대되고 있고, 20대에서는 순인구유출이 일정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 전남지역 연령대별 인구순이동률 추이



주 : 1) 20대 이상 순인구이동  
 2) 인구순이동률=(유입인구-유출인구)\*100/전년도인구,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7>은 연령대별 전남지역의 인구유출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대는 최근까지 인구가 순유출 되고 있지만, 로그함수의 흐름을 보이면서 순유출 폭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례로, 2004년만해도 17,995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2009년에는 순유출 인구규모가 6,55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다만, 2011년 이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매년 5천여명의 20대가 순유출되고 있다. 30대의 순인구이동 추이는 2010년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2004년에는 2,743명의 인구가 순유출 되었지만, 2015년에는 2,582명이 순유입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순유출에서 인구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40대와 5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순유입 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순유입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0대의 경우 순유입인구가 2009년에 1,28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이보다 두 배가 많은 2,651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최근 인구순유입 증가 속도는 40대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예를 들면, 50대의 순유입인구는 2009년에 1,244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이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3,098명을 기록하였다.

<그림 7> 전남지역 연령대별 순인구이동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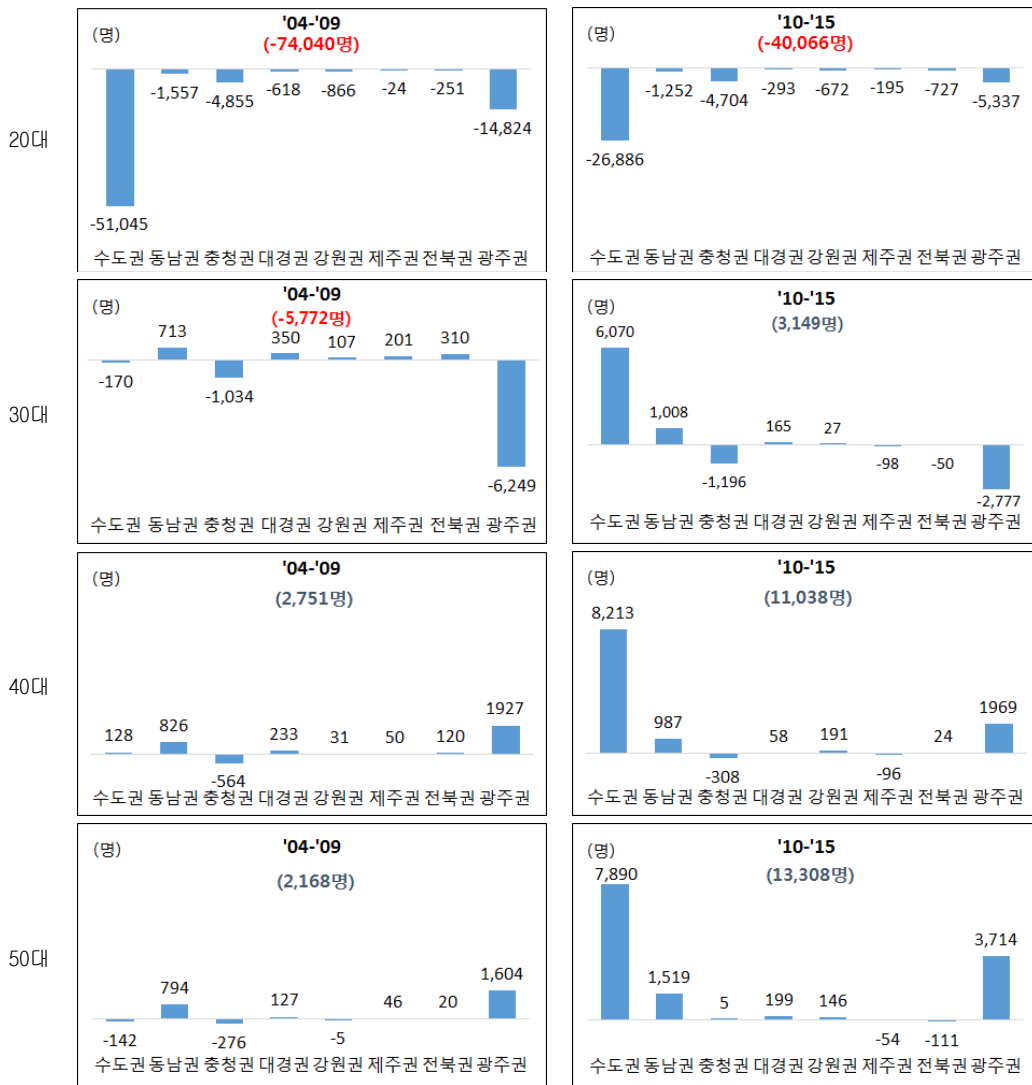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8>에서는 전남지역과 타 지역 간의 인구유출입 현황을 연령대별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20대는 전 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출 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인구수지로 해석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지 적자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20대의 상당수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남지역의 인재유출에 대한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연평균 12,000여명의 20대가 순유출 되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연평균 6,5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규모는 26,886명으로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규모(51,045명)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광주권으로의 순유출 규모 역시 2010년을 전후로 크게 줄었는데, 지난 6년간 광주권으로 순유출된 규모는 5,337명으로 금융위기 이전기간의 1/3수준이다. 30대는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광주지역으로 약 6천여 명의 인구가 순유출 되면서 전체적으로 동 규모만큼의 인구수지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으로부터 6,070명이 순유입 되고, 이 규모가 동 기간 동안 광주지역으로 순유출된 2,777명을 상회하면서 30대 전체적으로는 3,149명의 인구수지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40대와 50대는 지역별 인구유출입 측면에서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주로 동남권과 광주권에서 인구가 순유입 되면서 각 연령대별로 약 2~3천명의 순유입인구가 발생했다. 전남과 수도권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이 기간만 해도 유출규모와 유입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수도권으로부

터 대규모 인구가 순유입 되면서 각 연령대별로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유입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광주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인구규모에 있어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지역 40대 인구의 순유입은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0대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순유입 되는데다 광주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인구 규모도 2010년 이전 기간 1,604명에서 그 이후 기간 3,71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sup>8)</sup>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전남지역과 타 지역 간 인구유출입 현황



8) 전남지역의 귀농인수 추이를 보면 2013년 601명에서 2014년에 660명, 2015년에 7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 IV.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 1. 모델 및 실증분석 전략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구이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Todaro(1981)의 민간부문(금전적) 요인과 Tiebout(1956)의 공공부문(공공재 혜택)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민간부문 요인은 취업가능성, 기대소득 등 고용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공공부문 요인은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내지 제도적 기반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변수로는 각 지역의 고용률, 임금수준,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사용하며, 공공부문의 변수로는 전세 가격지수, 도로포장률, 문화서비스 혜택, 사회복지혜택, 의료시설의 사용 용이성, 교육여건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김성태·장정호(1997), 박성익(2006), 그리고 김현아(2008)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순재정편익 분석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패널표본의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시간을 통제한 이원오차성분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순재정편익 분석 모형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거주 지역을 선택한다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i$  지역의 대표적인 거주자는 어떤 요인으로부터는 편익을 얻고 그 외의 요인으로부터는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편익은 민간부문 변수인 고용률( $e$ ), 임금수준( $w$ ), 양질의 일자리 비중( $d$ )과 공공부문의 도로포장률( $r$ ), 문화서비스혜택( $c$ ), 사회복지혜택( $sw$ ), 의료시설의 사용 용이성( $m$ ), 교육여건( $sc$ )에 따라 증가하며 전세가격( $h$ )은 거주비용의 대응변수로서 비용을 유발한다고 간주한다.<sup>9)</sup> 이에 따라,  $i$  지역의 대표적인 거주자가 이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은 식(1)처럼 정리할 수 있다.

$$NB_i = B(e_i, w_i, d_i, r_i, c_i, sw_i, m_i, sc_i) - C(h_i) \quad (1)$$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거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i$ 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순편익과 타 지역,  $j$ 로 옮겼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예상순편익을 비교하여, 식(2)에서처럼 예상순편익이 큰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게 된다.<sup>10)</sup>

$$NB_{ij} = NB_i - NB_j = f(e_i, e_j, w_i, w_j, d_i, d_j, r_i, r_j, c_i, c_j, sw_i, sw_j, m_i, m_j, sc_i, sc_j, h_i, h_j) \quad (2)$$

9) 특정 변수가 편익을 가져다줄지 아니면 비용으로 작용할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10) 본고에서는 모형의 간결화를 위해, 현재 거주지와 이주후보지 중 한 곳을 비교한다.

이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식(3)과 같은 이주함수를 추정하게 되는 데,11)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t$ 년도의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를  $i$ 지역의 전년도 인구로 나눈 인구순이동률을 의미한다. (+) 부호는  $i$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의 순유입을 의미하고, (-)는 인구의 순유출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거주 지역( $i$ )이 다른 지역( $j$ ) 보다 고용률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을수록, 도로 포장률이 높을수록, 문화적 혜택의 기회가 클수록, 사회적 복지혜택이 많을수록, 의료시설이 많을수록, 교육여건이 양호할수록, 그리고 거주비용이 적게 들수록 현재 거주 지역  $i$ 에 잔류를 하게 되고, 반대로  $j$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i$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추정계수의 부호는  $\beta_9 < 0$  을 제외한 다른 추정계수는 (+)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beta_8$  은 (-)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12).

$$M_{ij}^t = \beta_0 + \beta_1 \frac{e_i^t}{e_j^t} + \beta_2 \frac{w_i^t}{w_j^t} + \beta_3 \frac{g_i^t}{g_j^t} + \beta_4 \frac{r_i^t}{r_j^t} + \beta_5 \frac{c_i^t}{c_j^t} + \beta_6 \frac{sw_i^t}{sw_j^t} + \beta_7 \frac{m_i^t}{m_j^t} + \beta_8 \frac{sc_i^t}{sc_j^t} + \beta_9 \frac{h_i^t}{h_j^t} + \epsilon_{i,j}^t \quad (3)$$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Pooled OLS를 적용할 경우, 식(3)의 오차항에 그룹(지역) 또는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는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편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식(3)의 오차항은 식(4)와 같이 관찰되지 않는 그룹의 특성( $\mu_i$ )과 관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 $\mu_t$ )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는 그룹과 시간이 동시에 고려된 이원오차성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13) 최종적으로는  $\mu_i$ 와  $\mu_t$ 를 추정해야할 모수로 보느냐 아니면 확률변수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고, Hausman 테스트를 적용하여 보다 바람직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epsilon_{i,j}^t = \mu_i + \mu_t + e_i^t \quad (4)$$

## 2. 변수 및 출처

먼저 종속변수인 두 지역 간 순인구이동률은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간단하게 산출방법을 설명하면, 매년 각 전입지(16개시도)마다 15개의 전출지가 있는 상황에서 두 지역을 한 쌍(a pair)으로 정리한 뒤,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 규모를  $i$ 지역의 전년도 총인구로 나누어 순인구이동률을 계산한다. 매년 120개의 쌍(pair)이

11) 한 세미나 토론자는 계수를 탄력성으로 해석하기 위해 로그형태의 변수 설정을 제안하였으나, 종속변수의 경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12)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의 내생성 내지 역인과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명변수의 경우, 전년도 변수를 이용한다. 하지만, 모델 표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시점을  $t-1$ 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13) 실제적으로는 두 지역에 존재하는 시간 불변 설명변수의 상대비가 통제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원오차성분모형은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익, 2006; Wozniak, 2010).

작성되는데, 이를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에 적용하여 총 1,440개의 표본을 생성한다. 전출지와 전입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쌍은 468개, 비수도권 지역 간의 쌍은 936개가 된다.

설명변수의 자료 출처 및 변수 생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률은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을 이용한다.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행정구역별 5인 사업체 규모의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을 사용한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규모있는 기업에 대한 취업 기회로 해석하기 위해 지역별 전체취업자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도로포장률,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천 명당 대학교 재학생수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를 이용한다. 거주비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전세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한다.

### 3. 이원오차성분모형 분석

<표 5>는 연령대별로 표본을 세분화하고 이원오차성분모형을 적용하여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첫째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여건에 있어서는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을수록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거지역( $i$ 지역)의 임금이 비교지역( $j$ 지역) 임금보다 두 배 높을 때, 준거지역에서의 인구순유입률은 0.136%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본고의 설명변수가 준거지역과 비교지역 변수의 상대비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적인 설명으로는  $i$ 지역의 임금이  $j$ 지역의 임금보다 10% 정도 높을 때,  $i$ 지역과  $j$ 지역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i$ 지역의 순인구유입률이 0.0136%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전세가격은 인구를 유인하기 보다는 인구를 유출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준거지역이 비교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이 두 배 정도 높다고 한다면, 두 지역에 있어서 순인구이동은 준거지역에서 비교지역으로 발생하며, 준거지역의 인구순유출률은 0.146% 증가한다.

공공재 혜택 내지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변수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한다. 교통, 문화, 의료 및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실례로,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에 있어서 비교지역에 비해 준거지역이 두 배 많다면 준거지역으로 0.12%의 인구 순유입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인구이동에 친화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구이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이동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혜계층이 일부 특정그룹에 국한되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혐오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연령대별 인구이동요인 결정요인 분석: 전 지역 간

	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고용률	0.082 (0.75)	-0.001 (1.56)	-0.003*** (3.01)	0.003*** (4.66)	<0.001 (0.58)
임금	0.136** (2.02)	0.004** (3.74)	0.002** (2.14)	<0.001 (0.05)	<0.001 (0.02)
양질의일자리비중	0.052* (1.80)	0.002*** (4.70)	<-0.001 (0.29)	<0.001 (0.21)	<0.001 (0.86)
전세가격	-0.146*** (4.58)	-0.001** (2.30)	-0.001*** (2.87)	-0.001*** (4.89)	-0.001*** (3.78)
도로포장률	0.233*** (4.68)	0.001 (0.65)	0.002*** (2.71)	0.001*** (3.19)	0.001*** (2.68)
문화기반시설수	0.120*** (8.63)	0.001*** (4.62)	0.002*** (9.27)	0.001*** (9.71)	0.001*** (6.42)
사회복지시설수	-0.069*** (11.77)	<-0.001*** (7.58)	-0.001*** (10.42)	-0.001*** (11.24)	<-0.001*** (9.17)
의료기관병상수	0.067*** (4.76)	<0.001*** (3.46)	<0.001 (1.13)	0.001*** (4.67)	<0.001*** (3.87)
대학생수	0.078*** (3.98)	0.002*** (6.09)	<0.001 (1.44)	0.001** (2.22)	<0.001*** (2.86)
하우스만(Chi2)	54.02	142.91	30.55	46.61	44.40
Prob> Chi2	0.00	0.00	0.00	0.00	0.00
표본수	1440	1440	1440	1440	1440
R2	0.261	0.143	0.215	0.281	0.171

주 : 1) 하우스만 검정시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면 확률효과 모형을, 기각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기술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표 5>의 두 번째 열 이하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여건은 주로 20~40대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률의 경우, 청년층과 중년층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30대까지만 해도 높은 고용률 자체는 인구이동에 있어서 그리 매력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지만, 40대에 있어서는 인구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30대는 임금 측면만을 중요시하고 있고, 20대는 임금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많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직장선호도가 급여와 기업규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전세가격은 모든 연령대에게 인구이동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집값이나 전세가격의 경우, 예전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획득을 목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지만(김현아, 2008), 전반적으로는 거주비용이 낮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로포장률이 높고, 문화기반시설이 풍부하고, 의료서비스혜택의 기회가 많고, 대학생수가 많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50대에서조차도 인구이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표 6> 연령대별 인구이동요인 결정요인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고용률	0.087 (0.38)	<0.001 (0.11)	-0.009*** (4.02)	0.005*** (3.87)	-0.001 (0.59)
임금	-0.141 (0.89)	0.006** (2.48)	-0.001 (0.23)	-0.004*** (1.02)	-0.002** (2.34)
양질의일자리비중	0.115 (1.52)	0.003** (2.52)	0.001 (0.49)	0.001 (1.02)	<0.001 (0.86)
전세가격	-0.140** (2.33)	-0.002* (1.68)	-0.001 (1.51)	-0.001** (2.16)	-0.001* (1.79)
도로포장률	0.330*** (2.67)	-0.001 (0.14)	0.001 (0.45)	0.002*** (2.39)	0.002** (2.41)
문화기반시설수	0.136*** (6.49)	0.001*** (4.12)	0.002*** (6.75)	0.001*** (7.36)	0.001*** (5.98)
사회복지시설수	-0.067*** (7.58)	-0.001*** (5.97)	-0.001*** (7.68)	-0.001*** (6.46)	<-0.001*** (5.57)
의료기관병상수	0.175*** (6.16)	0.002*** (4.88)	0.001* (1.66)	0.001*** (5.90)	0.001*** (6.03)
대학생수	0.148*** (3.80)	0.003*** (5.37)	0.001 (1.10)	0.001** (2.40)	0.001*** (2.64)
하우스만(Chi2)	114.45	136.75	33.07	95.07	86.21
Prob> Chi2	0.00	0.00	0.00	0.00	0.00
표본수	468	468	468	468	468
R2	0.526	0.196	0.442	0.515	0.462

주 : 1) 하우스만 검정시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면 확률효과 모형을, 기각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기술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제반 변수의 역할은 진출지와 전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간의 인구이동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표 6 참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 때, 고용여건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여건의 변수가 각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충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률의 경우, 30대에서는 인구를 밀어내는(push) 방향으로 효과가 있는 반면에, 40대에서는 인구를 이끌어내는(pull)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임금 또한 20대와 40대에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 변수의 경우, 20대에서만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

임을 알 수 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도 거주비용의 대응변수 역할이 확인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거주비 부담에 따른 이주의 제한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 혜택이나 삶의 여건과 관련한 제반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 지역 간의 이동에서 도출되었던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문화적 향유 기회, 병원시설의 사용 용이성, 양호한 교육여건 등은 인구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7>은 지역의 고용여건과 삶의 질에 관한 제반 여건이 비수도권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이 받아들여져 확률효과 모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표 5> 또는 <표 6>의 결과와는 다르게, 많은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표 7> 연령대별 인구이동요인 결정요인 분석: 비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고용률	-0.075 (1.04)	-0.001** (2.36)	0.001 (0.19)	0.001*** (2.95)	<0.001 (0.84)
임금	0.131*** (3.16)	0.003*** (3.22)	0.001** (2.11)	0.003 (1.14)	<0.001 (1.21)
양질의일자리비중	0.023 (1.56)	0.001*** (2.61)	<0.001 (0.44)	<0.001 (1.07)	<0.001 (0.91)
전세가격	-0.008 (0.30)	<0.001 (0.43)	<-0.001 (0.36)	<-0.001 (0.61)	<-0.001 (0.75)
도로포장률	0.034 (1.25)	0.001*** (2.60)	<0.001 (0.20)	<-0.001*** (3.42)	<-0.001 (0.66)
문화기반시설수	0.039*** (3.16)	0.001*** (2.14)	<0.001** (2.15)	<0.001** (1.71)	<0.001** (2.46)
사회복지시설수	0.002 (0.27)	<0.001 (0.58)	<-0.001 (7.68)	<-0.001 (0.71)	<-0.001 (0.78)
의료기관병상수	0.009 (0.93)	<-0.001 (0.09)	0.001 (0.49)	<0.001 (1.02)	<0.001 (1.16)
대학생수	0.004 (0.49)	<0.001 (1.59)	<-0.001 (0.53)	<-0.001 (0.16)	<0.001 (0.35)
하우스만(Chi2)	11.44	14.24	10.81	9.73	11.51
Prob> Chi2	0.25	0.11	0.28	0.37	0.25
표본수	936	936	936	936	936
R2	0.050	0.072	0.022	0.043	0.028

주 : 1) 하우스만 검정시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면 확률효과 모형을, 기각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기술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고용여건에 있어서는 고용률의 영향이 20대와 40대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전

체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은 20~30대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모 있는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20대에서만 나타났을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비용이나 삶의 질에 관한 제반 변수가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기반시설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별 변수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화기반시설수가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서도 여전히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우선 고용여건의 영향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초기인 20대에는 고용가능성(고용률) 보다는 생애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기대소득(임금,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거주지 선택 또는 이주의 중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4)</sup> 30대에서는 고용률과 임금의 인구이동 효과가 서로 상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높고 임금이 낮은 지역 보다는 고용률이 낮더라도 임금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0대에 들어서는 기대소득보다는 고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인구이동이 결정되게 된다. 임금수준이 여의치 않더라도,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전세가격이나 삶의 질에 관한 변수들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전 연령대에서 주거비용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고, 문화기반시설수와 의료기관병상수는 문화서비스의 혜택 내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풀이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표 8> 연령대별 인구이동 주요 결정요인

	고용여건	삶의 질 여건
20대	임금(+), 대기업취업자비중(+)	전세가격(-),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30대	고용률(-), 임금(+)	전세가격(-),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40대	고용률(+),	전세가격(-),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50대		전세가격(-),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주 : 1) (+)는 인구유입 요인, (-)는 인구유출 요인을 의미

2) 인구이동 유형별 분석시 계수값이 두 군데 이상에서 같은 방향의 부호로 판정될 경우에만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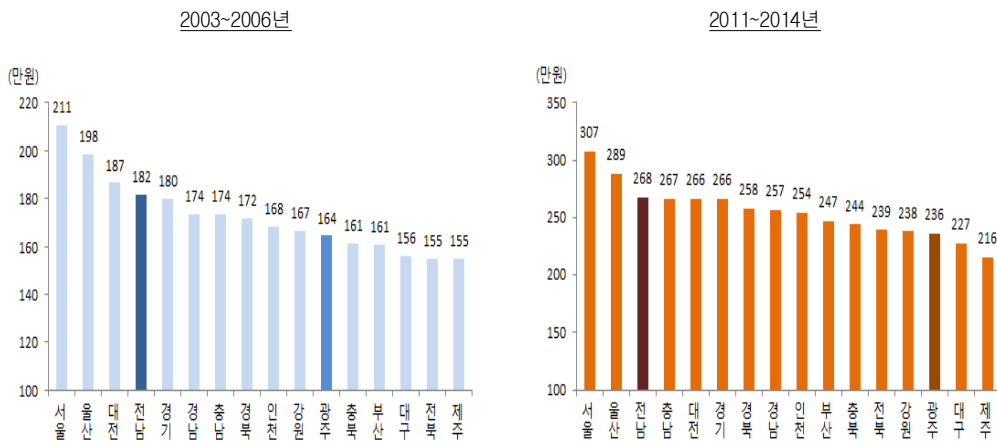
14) 정민수·김기승(2013)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 4.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본고의 연구목적 중 하나는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최소화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소절에서는 지역패널분석에서 도출된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금융위기 이전 기간(2003년~2006년)과 이후 기간(2011년~2014년)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비교를 실시한다.<sup>15)</sup>

<그림 9>는 각 지역의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4년 동안의 기간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서울이 21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82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4위, 광주는 164만원으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낮은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236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광주지역의 근로여건이 임금 또는 보상측면에서 매우 열악함을 의미하는데, 20대 연령대의 인구 순유출도 이와 같은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남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지난 4년간 월평균 임금수준이 268만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남의 경우 지역 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종합제철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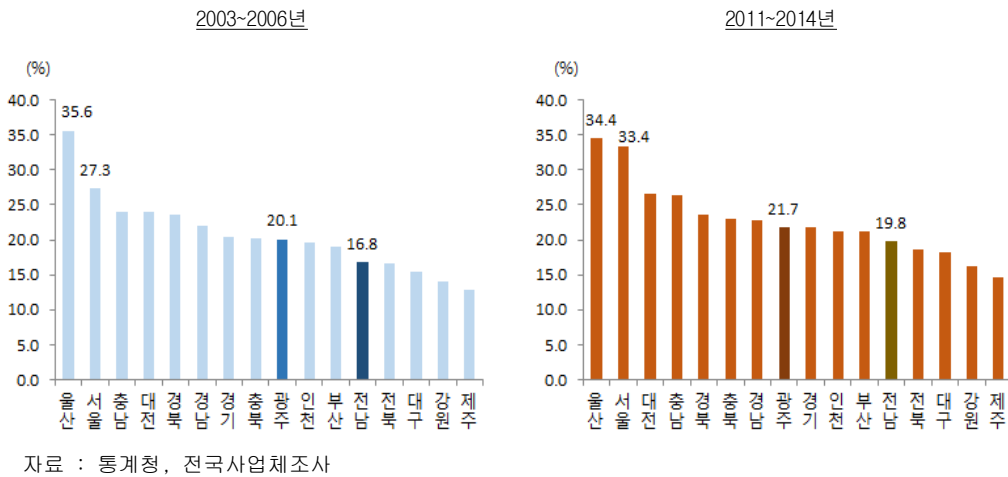
하지만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남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전체 취업자 중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

15)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본 소절의 지역 간 비교분석에서는 2007년~2010년 기간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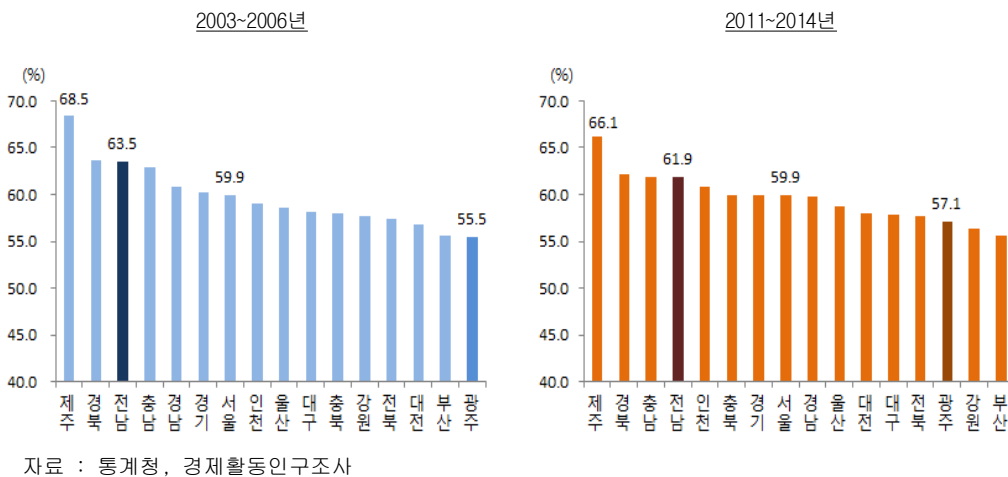


16.8%에서 금융위기 이후 19.8%로 증가하였지만, 16개시도 중에는 12번째이다. 그런 점에서 전남지역 20대 연령층의 인구유출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전체 취업자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중은 20%~22%로 전국적으로는 중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10> 전체취업자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중



<그림 11> 40대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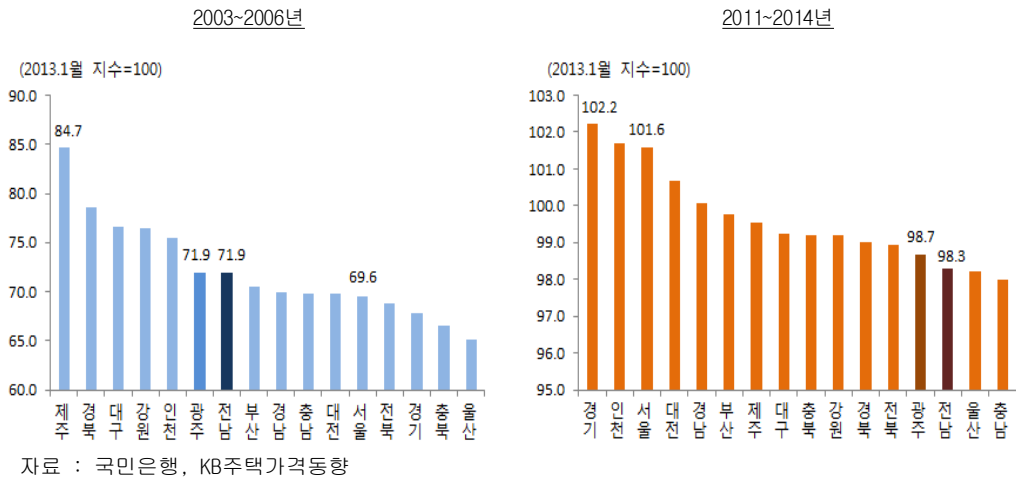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40대 연령대의 경우 광주는 인구 순유출 상황이고, 전남은 인구 순유입 상황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40대의 인구이동은 고용여건과 관련해서 동 연령대의 고용률, 다시 말하면 고용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이

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전남은 40대의 고용률이 62~64% 내외 수준으로 16개시도 중 최상위권에 들어 있는 반면에, 광주는 동 연령대의 고용률이 55~57%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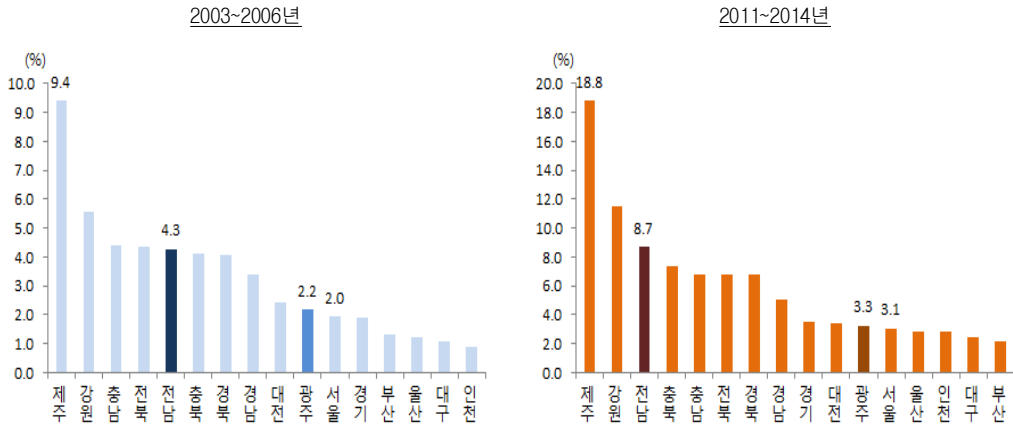
한편 <그림 12>는 지역별·기간별 전세가격지수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변수들은 지역별 순위에 있어서 금융위기 전후 기간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양 기간 사이에 큰 변동이 발생하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증가폭이 낮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광주와 전남의 전세가격지수는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각각 13,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선 실증분석에서 전세가격이 주거비용의 대용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결국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거주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전세 가격지수



<그림 13>은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에 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에 상관 없이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40대 이상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고용여건의 영향력 대신에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연령대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주 확대는 문화기반시설수의 증가에 따른 문화혜택 기회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그렇다면,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이동에 관한 취약요인을 개선할 경우 인구유출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까? <표 9>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이 변한다고 가정할 때,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의 인구순이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절차는 먼저 지역의 변수(2014년 기준)가 전국 평균값과 어느 정도 차이(비율 기준)가 나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실증분석의 계수값에 연동시켜 개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순인구변동률을 계산한다. 인구를 유인하는(pull) 요인 중에서 지역의 변수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국평균값으로 증가한다고(즉 인구유입요인의 개선) 가정하며, 반면에 인구를 밀어내는(push) 요인 중에서 지역의 변수 값이 전국평균보다 클 경우에는 전국평균으로 감소(즉 인구유출요인의 완화)한다고 가정한다. 가정A의 경우 지역의 모든 변수 값이 전국평균으로 바뀌었을 때, 지역의 인구순이동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가정B의 경우에는 인구유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수 값만이 전국평균으로 수렴되었을 때, 인구순이동률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광주지역의 경우, 인구이동의 제반 변수가 전국평균 값으로 대체된다고 한다면(가정A), 순인구유출효과가 0.073%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광주의 순인구이동률이 -0.89%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의 제반 변수값이 전국 평균값과 같게 되면 오히려 순인구이동률이 -0.963%가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광주지역의 낮은 전세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거나 대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인구유출이 확대되는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반면에, 인구유입에 있어서 취약적인 요인만을 전국 평균값으로 개선시킬 경우(가정B)에는 순인구 유입효과가 0.186%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금 개선 등이 순인구이동률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순인구이동률이 -0.89%에서 약 -0.70%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인구이동 결정요인 개선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변수 값을 전국 평균값으로 대체하거나(가정A) 취약요인만을 개선시킬 경우(가정 B), 인구순이동률이 각각 0.199%, 0.309% 높아지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남의 인구순이동률이 0.34%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인구순이동률이 가정A의 경우에는 0.54%까지, 가정B의 경우에는 0.65%까지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남지역의 이러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비중의 증가와 같은 고용여건의 개선, 대학생 수 증가와 같은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도로포장률 제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가동요인 개선에 따른 인구순이동률 시뮬레이션

변수	광주 (=A)	전남 (=B)	전국평균 (=C)	전국평균 대비 광주 비율 (D=C/A)	전국평균 대비 전남 비율 (E=C/B)	실증분석 계수 (=F)	광주 순인구 이동 변동률 (G=D/2*F)	전남 순인구 이동 변동률 (H=E/2*F)
고용률 (%)	56.4	61.0	59.4	1.053	0.973	0.082	0.043	0.039
임금 (만원)	249.3	278.0	283.8	1.138	1.020	0.136**	0.077	0.069
대기업종사자비중 (%)	20.1	19.4	22.2	1.104	1.144	0.052*	0.028	0.059
전세가격 (2013년 1월=100)	104.3	100.3	107.7	1.032	1.073	-0.146***	-0.075	-0.078
도로포장률 (%)	100.0	78.86	84.89	0.848	1.076	0.233***	-0.098	0.125
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	3.66	9.39	4.91	1.341	0.522	0.120***	0.080	-0.031
사회복지시설수 (인구십만명당)	11.9	22.7	13.8	1.159	0.607	-0.069***	-0.040	0.021
의료기관병상수 (인구 천 명당)	22.75	19.92	12.62	0.554	0.633	0.067***	-0.018	-0.021
대학생 수 (인구 천 명당)	42.44	20.86	29.67	0.699	1.422	0.078***	-0.073	0.055
가정A) 각 지역의 변수 값이 전국 평균값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의 순인구가동 변동률(합계) <sup>1</sup>							-0.073	0.199
가정B) 각 지역의 취약 변수 값이 전국 평균값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의 순인구가동 변동률(합계) <sup>1,2</sup>							0.186	0.309

주 : 1) 순인구가동 변동률(합계) 계산시, 고용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2) 취약변수(2014년 기준)는 지역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구유출 요인으로 작용(예: 임금)하거나, 지역의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높아 인구유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예: 전세가격)의 변수를 총칭  
 3) 순인구가동변동률이 (-)이면 순인구유출 효과가 나타나고, (+)이면 순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

## V. 요약 및 정책과제

### 1. 결과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을 다면적(연령별, 지역 간 이동)으로 검토하고, 16개 광역지자체 간 인구이동에 관한 패널분석을 통해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최소화 대책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과 관련해서는 첫째,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은 주로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지 광주지역으로 진학 또는 수도권 취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40~50대의 경우 2010년을 전후하여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수도권에서의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광주지역은 수도권에서의 유입보다 전남권으로 유출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40~50대에서는 순유출 되고 있으나, 전남은 40~50대의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의 증대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는, 첫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는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이주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30대는 임금, 40대는 고용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의 인구이동 관련 정책은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반면에 중장년층에서는 일자리의 양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대에 상관없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제반 요인(전세가격, 문화서비스 혜택, 의료서비스 혜택, 교육여건, 도로포장률 등)은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의 대응변수로 사용한 전세가격의 인구이동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해당지역에서는 인구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원인은 위의 결과와 부합됨을 확인하였다. 광주는 고용여건 측면에서 낮은 임금이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이지만,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부담이 인구유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에서는 20~30대의 인구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다. 고용여건 측면에서 평균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 일자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뿐,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 저하도 인구유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취약요인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때 인구순이동률 증가효과는 광주의 경우, 0.186%, 전남의 경우 0.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과제

기본적으로 인구유출 최소화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동안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중 가장 특징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청년층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지역내외에서 단계적이며 연쇄적인 이주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전남지역의 20대는 취약한 교육여건으로 인해(예: 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 부재) 광주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광주에서 대학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전남에서 광주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이주해온 청년들 포함)은 지역의 열악한 임금수준과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 기회로 인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광주·전남의 인구유출 폭이 점차 축소되고, 일부 연령대에서 인구유입으로 전환된 데에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수 측면에서 전남은 다른 도에 비해,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인구유입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수급정책의 시행과 함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질적 차별화 내지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 지역 소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대학의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전남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의 인구 또는 산업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산업기반과 연계되거나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특화된 고등교육 기관이 부재하다.<sup>16)</sup> 따라서, 전남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 항공우주산업 기반, 생명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콘텐츠에 바탕을 두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잔류를 촉진할 수 있다. 단순히 기존 대학의 프로그램 개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환경을 특성화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 역시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3대 전략산업 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16) 다른 지역의 경우, 경북지역에는 포항공대, 충북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충남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 나.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

광주·전남 지역의 고용여건은 아직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측면에서 열악한 편이지만, 향후 전략산업 또는 특화분야 추진 시 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영세기업의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많은 청년들은 고용의 안정성이 일정수준 제공되고 중간수준의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소위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는 지역인재의 잔류를 도모하고, 다른 지역 인재의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다. 주택수급정책의 안정화

2000년대 들어 물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거세지면서, 주거안정에 대한 이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주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거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실례로,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계속해서 인구엑소더스(exodus)가 발생하면서 서울의 천만인구 붕괴가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택수급정책을 펼침으로써 인구이동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정책은 제외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주택수급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 인구의 유출입에 줄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라. 문화기반시설의 고도화

광주·전남 지역은 흔히 문화의 도시 내지 문화의 수도라고 일컫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기반시설수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및 시설을 고도화하는 게 시급하다. 급속한 기술 진보로 인해 예전처럼 하드웨어적인 문화기반으로는 문화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끌어들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확장 고도화<sup>17)</sup>시킴으로써 부가적으로는 인구유입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17) 예를 들어, 광주 신창동 유적과 전남 나주 반남고분군 중심의 영상장 유역권 마한문화를 만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 소재로 활용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연구해 다양한 콘텐츠로 재현하는 ‘OSMU(원소스 멀티유스, 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기승·정민수(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pp. 103-130.
- 김리영·양광식(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 1-20.
- 김성태·장정호(1997),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pp. 175-197.
- 김현아(2008),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0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 75-103.
- 민인식·최필선(2012),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지필미디어.
- 박성익(2006), “지역별 인구 변동 및 경제적 요인 분석: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및 요인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pp. 1-35.
- 박추환·김명수(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지역학회, pp. 97-113.
- 이찬영(2015), “The effect of local labor demand on employment location of college graduates from non-capital regions in Korea”, 「경제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경제통상학회, pp. 107-130.
- 최성호·이창무(2013),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부동산학회, pp. 87-102.
- 홍성효·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서울연구원, pp. 1-19.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각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각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귀농어귀촌인통계」 각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각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각연도
- Conway, Karen S. and Andrew J. Houtenville(2003),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Old: A Closer Look at Younger Versus Older Elderly Migr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84, pp. 309-328.
- MacKinnish, Terra(2007), “Welfare-induced migration at state borders: New evidence from Micro-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pp. 437-450.



- Plantinga, Andrew J., Cecile Detang-Dessendre, Gary L. Hunt, and Virginie Piquet(2013), “Housing Pirces and Inter-Urban Migration”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43, pp.296-306.
- Tibout, C. M.(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 *Journal of Polital Economy*, 64, pp. 416-424.
- Todaro, Michael(1981),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Longman Inc.
- Wozniak, Abigail.(2010), “Are College Graduates More Responsive to Distant Labor Market Opportunities?” ,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 pp. 944-970.